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월 16일(목)

CONTENTS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IB 2020-01)

CONTENTS

- I.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1
- II.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7
- III.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14
- IV.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 21

발 행 인: 성동규

편 집 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창배,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월 16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1월 3째주)에는 선거연령 하향 이슈, 美-이란 충돌사태, 청년 보수정치 성공 사례,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등 4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현실화에 따른 당의 역할 및 대응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사태의 현황을 파악, 향후 한반도에 미칠 파장과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제3편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보수정당·단체의 청년 정치 성공사례를 검토했으며, 제4편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 평가,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1편: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국회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선관위가 '학교의 정치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요청. 선거연령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당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함. 대신 선거 유·불리를 예단치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그동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함

제2편: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이윤식 안보통일센터장)

1.3(金) 美는 'MQ9 리퍼(드론)'을 활용, 이란군 사령관 솔레이마니(63)를 제거. 평시에 타국 지휘관을 사살한다는 건 상당한 후과가 예상돼 쉬운 선택이 아님에도, 트럼프의 전격적 결단으로 작전을 수행. 이에 이란은 '핏빛 깃발'을 올리며 결사 항전태세(△1.5 핵협정 탈퇴, △1.8 미군기지 공격)를 다짐했으나, '여객기 격추' 사건(1.8)으로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전개. 일각에선 중동의 전운이 새 국면에 접어들며 단기간 내 정리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국제유가 폭등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파장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평가. 한편, 이번 사건은 북한에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습을 감행해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

제3편: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김진솔 연구원)

당의 청년층 지지 확대를 위한 각종 노력에도 2030의 지지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보수는 늙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깨고 청년층을

핵심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일본 자민당은 주요 타겟층을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전환, '젊은 정당' 이미지를 표방하며 각종 콘텐츠, 맞춤형 공약집을 생산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보수단체를 조직, 자유·보수의 가치를 '아래서 위로' 확산시켜가고 있음.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청년 포섭 사례를 참고해, 우리 당도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정책개발 및 전략체계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함

제4편: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황성현 변호사)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를 위하여 행·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소상공인 영역에 특화된 기본법 제정안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담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향후 과제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위상 격상, 소상공인단체 결정의 구체화가 필요함

1.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작성: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kim.chang.bae@ydi.or.kr)

국회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선관위가 ‘학교의 정치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요청. 선거연령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당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함. 대신 선거 유·불리를 예단치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그동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함

1. 개정 16일 만에 보완입법 요청받은 선거연령 18세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이 졸속·날림의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 (2019.12.27)
 - 실제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준준연동형비례대표제’ 라는 대형 이슈에 가려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6차례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선거연령과 관련된 실질적 언급은 단 한 차례에 불과
 - 지난해 6월 27일 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이 선거연령 하향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 이와 같은 졸속입법은 개정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의 정치화’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라는 입법 요청으로 귀결

○ 우리 당은 물론 전문가들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소위 ‘교복투표’의 문제였음

- 개정 선거법에 의하면 올 4월 15일까지 18세가 되는 약 53만여 명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됨

• 2001년 4월 16일 ~ 2002년 4월 15일 기간 출생자가 여기에 해당

- 이 중 2002년 3월 1일 ~ 4월 15일 출생자는 고3 학생으로 약 5만명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 당이 지적해 왔던 ‘교실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에 주력할 필요

○ 현 제도에서는 학교 교실의 정치화는 물론 선거 활동이 가능해진 18세 고3 학생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

2. 선거연령 재조정보다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할 때

□ 선거연령을 낮춘 법 개정은 비가역적임을 명심

○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

○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음

- 선거연령 하향의 핵심 지지 논리 중 다음과 같은 ‘국민주권확대’, ‘청소년 권리신장’ 등은 국민 수용성이 높은 명분임을 인정해야 함

-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사항들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으로 ‘국민주권원리’에 부합
-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 없음
- 글로벌 경쟁시대의 주권자로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고력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

○ 선관위도 선거연령의 경우 보완 입법을 주문한 것이지 선거연령 재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이제는 선거 유·불리를 예단치 말고 전향적 자세를 가질 때

○ 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10대 유권자들이 ‘표 계산’에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높지만 최근 젊은 보수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기성 제도권을 불신하고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

- 실제로 요즘 10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는 우파 세력이 다소 우세한 경향임

○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

- 민주당은 이미 ‘청년 인재영입’ 발표를 시작했으며 정의당은 만 18세 예비당원들의 ‘대규모 입당식’을 추진

- 우리 당은 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속도감 있는 전략 기획과 추진이 필요

□ 우리 당은 보완 입법을 주도할 명분을 가지고 있음

○ 우리 당은 선거연령 하향의 부작용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음

-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 등을 핵심 부작용으로 지적

-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현고 사례처럼 ‘정치편향 교육’ 논란 재현 가능성
- 선거권이 없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 교내 정치 활동으로 선거사범 양산이 우려되며 이 경우 민법, 청소년법 과도 충돌이 예견
- SNS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학생들이 유언비어나 흑색·비방 게시물을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는 등 선거법 위반 위험에 노출

- 선거연령 하향 찬성 논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음

- OECD 국가들의 선거연령이 대부분 18세인 것은 취학연령이 빠르거나 학제가 달라 18세가 되면 의무교육 과정을 졸업하기 때문
- 병역법에 따라 18세부터 병역준비에 편입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인 19세 이상부터 군에 입대하는 것이 현실

○ 선거연령 하향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조치를 전제로 한 찬성입장이었음을 강조할 필요

3. 향후 우리 당의 대응방향

□ 보완조치 및 법 개정 등을 통한 교육 현장의 정치화 차단

○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

- 선관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나눠주는 것, 연설하는 것,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 등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
- 사립학교 교사의 선거개입 행위도 명확히 금지해야 함
 - 현행 선거법은 국·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사에 관한 조항은 없음

○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고교생 유권자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토록 촉구해야 함

○ 학생들이 일부 세력에 의해 편향적 세계관을 주입받지 않도록 경계

- 고교생 대상 선거 교육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정치중립적인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함
 - 실제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끄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총선에 대비해 서울시 초·중·고 선거교육책임단체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 는 언론 보도도 있었음

○ 학제 개편과 민법 개정,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논의

-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소위 ‘교복투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당겨서, 18세가 되면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

□ 청소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마인드 및 전략 구축

-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2030세대의 비호감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에게 정치를 건강하고 바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
 -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교류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가 좋아할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
 - 모의유엔, 모의국회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 자리를 제공해 청년층들이 사회적 이슈에 바람직한 인식을 갖도록 유도
 - 청소년이 건강하게 정치를 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조성
-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교육 원칙을 정립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도
 - 1976년 좌우진영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특정 이념의 교육을 금지하는 등의 원칙을 정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대표적 사례

II.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¹⁾

작성: 이윤식 안보통일센터장 (lee.youn.seek@ydi.or.kr)

1.3(金) 美는 ‘MQ9 리퍼(드론)’을 활용, 이란군 사령관 솔레이마니(63)를 제거. 평시에 타국 지휘관을 사살한다는 건 상당한 후과가 예상돼 쉬운 선택이 아님에도, 트럼프의 전격적 결단으로 작전을 수행. 이에 이란은 ‘핏빛 깃발’을 올리며 결사 항전태세(△1.5 핵협정 탈퇴, △1.8 미군기지 공격)를 다짐했으나, ‘여객기 격추’ 사건(1.8)으로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전개. 일각에선 중동의 전운이 새 국면에 접어들며 단기간 내 정리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국제유가 폭등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파장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평가. 한편, 이번 사건은 북한에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습을 감행해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

1. 배경 및 현황

- 현지시간 1.3(金) 미국이 무인기를 활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를 제거하는데 성공
 - 미군은 솔레이마니 일행이 바그다드 공항 출발 직후 ‘MQ9 리퍼’에 장착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2발을 차량에 명중시켜 암살
 - ※ ‘MQ9 리퍼’는 전폭 18m의 대형 드론으로 미사일 14발 탑재가 가능하며, 항속 거리가 약 6000km로 美 본토에서 일본까지 타격 범위에 포함
 - 작전은 ‘임기 표적(target of opportunity)’ 방식으로 수행됐는데, 사전 계획없이 실시간 드러난 표적의 동선을 보며 공격하는 방식

1) 본 보고서는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는 바, 불가피하게 시점을 한정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솔레이마니 제거(1.3)부터 트럼프의 對국민연설(1.9)까지만 분석하고, 후속 보고서에서 보완해 갈 예정.

- 그러나 전시도 아닌 평시에 타국의 지휘관을 사살한다는 건 상당한 법적·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쉽게 선택할 옵션이 아님
 - 당초 트럼프도 이라크 미군기지에서 자국민 근로자 1명이 로켓 공격으로 사망(12.27)했음에도, 솔레이마니 제거안을 옵션에 미포함
 - 미국은 ‘대응 공격’으로 12.29(日)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시리아 내 시아파 민병대 조직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을 폭격
 - 그러나 12.31(화) 시아파 민병대가 바그다드 주재 美대사관을 습격하자, TV를 지켜보던 트럼프가 격노해 솔레이마니 제거(1.3)를 지시
 - 한편, 솔레이마니 제거 전까지 미국이 타국 軍 고위 인사를 사살한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함대 사령관이 마지막
 - 이러한 전후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 지시는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이에 이란은 즉각 ‘피의 보복’을 천명(美시설 35곳 타깃)하며, 이슬람 사원에 붉은 깃발을 게양하고 결사 항전의지를 불태움
 - 구체적 조치로 1.5(日) 이란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동결·제한 철회와 군사보복”을 밝히며 전운이 팽배
 - ※ JCPOA: P5+1(독)과 이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2015.7月) => △핵 조치, △제재해제 공약, △민간 원자력협력, △공동투자 구성, △합의 이행 등
 - 급기야 1.8(水) 새벽 이란은 작전명 “샤히드(순교자) 솔레이마니”에 입각해 이라크 美기지 2곳(아르빌, 알아사드)에 미사일 22발을 발사
 - 당초 이란이 美 고위급에 대한 암살 등 대칭적 보복보다는 다양한 ‘비대칭적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적중하는 순간

-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이란의 공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군사적 보복이 아닌 경제적 압박이란 점에서 일단 전면전 위기는 봉합
 - 당초 예상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거나 군사공격에 나서는 등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어 중동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컸음
 - 그러나 이란의 공격에 미군의 인명 피해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전면전은 부담스럽다는 요인이 동시 작용
 - 특히, 이란도 확전을 경계하며 ‘親이란 무장단체에 대미 공격자제를 요청’. 단, 소규모 국지적 무력시위 및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
- ※ 향후 예상되는 조치는 걸프해 지역의 美軍 자산에 대한 공격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사우디·UAE 등 親美 국가의 석유시설에 대한 공습 등이 예상

2. 파급 영향

□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²⁾

- 먼저, 유가에 미칠 영향은 증동發 ‘공포 프리미엄’의 급등으로 단기 상방위험이 증대됐으며, 사태 장기화시 유가 강세는 불가피
 - 美-이란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아도, 이라크 남부 유전 지대의 생산 차질과 이란의 원유수송 방해 등으로 브렌트油 가치는 배럴당 \$80로 급등할 전망
 - 현재 이란의 ‘여객기 격추’에 따른 국면 전환으로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유가는 배럴당 \$150 이상까지 갈 수도 있음

2) 김희진·오정석, “최근 증동정세 불안에 대한 해외시각 점검,” 「Issue Brief」, (2020. 1. 7.) 참조.

- 다만, \$150 수준에선 공급이 조정되고 수요가 위축될 것이므로 \$100 이상 高수준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반면, 글로벌 원유시장의 펀더멘탈이 견고해 미국-이란간 갈등이 완화될 경우, 국제유가도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

※ 작년 9월,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당시 유가 상승세가 단기에 그쳤던 점에 비춰 볼 때, 이번에도 유가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0.3%)과 유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

- 이란 경제 붕괴 및 심리적 효과로 세계 성장률은 0.3% 위축되고, OECD 회원국들의 물가는 3.5~4.0%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최근 美경기가 유가 급등 후 침체했던 것에 비춰볼 때, 유가가 \$80 수준으로 상승하면 증시 약세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초래될 우려

-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년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 불가

- 즉, 문제가 없었던 국제유가가 1.7(火) 단 하루 사이에 2.2% 급등하며, 우리의 정유·해운·항공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한반도에 미칠 영향

- 이번 사건은 북한 등 불량국가에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습을 감행해 고위인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임

- 특히, 김정은의 동선이 확실히 노출되는 금수산 태양궁전, 黨중앙위 청사,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공격 가능

※ 현재 미국은 스텔스 무인공격기 ‘어벤져’를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자전기를 동원하면 스텔스 기능 없이 드론만으로도 北 고위층 제거공격이 가능

-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과 이란은 핵보유국과 非보유국으로 애당초 양국을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함
-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재래식 방공망은 이란에 비해 훨씬 조밀하며, 최근엔 휴민트 등도 부족해서 김정은이 창린도(11.23)에 방문하는 것도 파악이 안되는 수준이란 비판도 있음

○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美가 대북 군사옵션 활용 가능성이 높다”란 평가와 “북한과 이란 문제는 수평 비교가 불가하다”란 시각이 공존

- 패트릭 크로닌(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美의 솔레아마니 제거로 김정은은 자신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

- 에반스 리비어(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 까지 갔던 2017년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은 더 이상 ‘물밑 카드’가 아님을 확인시켜 준 사건”

- 반면, 게리 세이모어(前 백악관 WMD조정관): “이번 對이란 공습은 북핵문제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며,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박정현(브루킹스원 한국석좌):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美의 잠재적 정권교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강화에 나설 것”이라 전망

○ 이렇게 볼 때 서로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은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것이 명확해 보이며, 중동 정세와 연동된 대미 협상력 증대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

3. 향후 전망 및 대응

- 중동 불안이 단기적·제한적 이벤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중동 내 반미 감정 고조, 11월 美대선 등으로 정세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전면전으로의 비화나 극적인 타격을 통한 갈등 종식보다는 제한적 충돌 내지 핵심 시설들에 대한 공습의 가능성이 높은 바,
 -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에게 미칠 파장을 분석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차곡차곡 마련해 두는 게 중요
- 특히, 우리 입장에서선 호르무즈 해협 안전이 경제문제 및 교민 안전과 직결된 바, 예정대로 호르무즈 파병을 진행할 것을 文정권에 촉구
 - 호르무즈 해협 폐쇄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적 여파, 이란·이라크 교민(1900여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바, 한미동맹을 넘어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파병해야 함을 강조
 -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 눈치를 보며 주저하다가 파병의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전례로 볼 때,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
 - ※ 중동 긴장 고조에도 아베 총리(1.6)는 “일본 선박의 안전한 항행 확보, 정보 수집 태세 강화를 위해 예정대로 해상 자위대 파견”을 공식 발표
 - 무엇보다 “어려울 때 동맹이 진정한 동맹”임을 강조하며, 한미공조 강화 및 동맹 복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文정권에 재차 각인
- 그런데 문제는 현 국면에서 북한도 미국도 아니라는데, 문재인 정부 혼자서만 몸이 달아 ‘남북 속도전’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는 점임
 - 文대통령이 신년사(1.7)에서 “하노이 노딜 후 ‘한국의 역할 축소’를 반성하며, 비핵화 교착국면 돌파와 김정은 답방 추진” 등 ‘6대제안’을 밝혀, 현 정세와 맞지 않는 오판을 한다는 게 문제

- ※ 대북 6대제안: △김정은 답방, △철도도로연결, △접경지역 협력, △DMZ 유네스코 등재,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6.15 20주년 공동행사 추진 등
- 북한이 통미봉남을 고수 중인 상황에서 '답방 제의'에 화답할지 미지수이며, 오히려 제재공조 이탈 등 미국과 균열만 확대될 수 있음
- 이에 우리의 입장에서선 4월 총선 전까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4월까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외교안보 변수는 크게 △시진핑 방한, △김정은 답방,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3가지가 있음
- 먼저, 청와대는 시진핑 방한을 총선 전(3월 중순경 예정)에 추진해, 사드로 인한 중국의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했다는 '쇼'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 할 것임
- 다음, 김정은 답방을 총선 전에 성사시켜, 지난 지방선거(6.12 싱가포르 회담)에서처럼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임
 - 다만, 김정은 답방을 위해선 '철도연결이나 개성공단' 등 선물을 줘야 하는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미국과 관계 악화를 무릅써야 하는 상황
- 마지막,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제11차 SCM, 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선거에 활용할 가능성도 다분
 -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50억불)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속 어필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총선 승리에 이용
- 결론적으로 이번 美-이란 충돌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보는 이란과 '핵·미사일 커넥션'을 유지해 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2020년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것을 文정권에 강력 촉구

Ⅲ.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작성: 김진솔 연구원 (kim.jin.sol@ydi.or.kr)

당의 청년층 지지 확대를 위한 각종 노력에도 2030의 지지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보수는 늙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깨고 청년층을 핵심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일본 자민당은 주요 타겟층을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전환, ‘젊은 정당’ 이미지를 표방하며 각종 콘텐츠, 맞춤형 공약집을 생산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보수단체를 조직, 자유보수의 가치를 ‘아래서 위로’ 확산시켜가고 있음.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청년 포섭 사례를 참고해, 우리 당도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정책개발 및 전략체계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함

1. 현황 및 진단

- 12.24(火), 엠브레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代 한국당 지지율은 7.3%로 민주당 지지율 34.3%와 약 4.7배 차이
 - 연이은 청년 관련 정책 발표 및 행사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실정
 - 청년을 타겟팅한 카드뉴스와 유튜브 등이 생산되고 있지만, 내용 및 구성에 있어 기존의 올드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해외 보수정당들은 “보수는 중장년층, 진보는 청년”이라는 통념을 깨고, 2030 맞춤형 콘텐츠·전략으로 보수청년정치 시대를 개막
 - 특히, 日 자민당 및 美 청년보수단체는 ‘2030세대 지지확대 전략’을 적극 전개하며, 청년층을 핵심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 일본·미국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당이 처한 ‘청년 지지율 절벽’의 원인을 파악, 청년 보수를 투표장으로 유인할 전략 마련이 긴급

2. 위에서 아래로(Top-down): '젊은 정당' 표방한 日 자민당

□ 아베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부상한 2030 세대

- 아베 정권은 사학 스캔들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성공과 탄탄한 청년층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져옴
 - 경제정책 성공으로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도 아베를 적극 지지하며 청년층이 핵심지지층으로 부상
 - △실업률 2.2%(27년만에 최저), △83개월 연속 최대 취업자수 경신, △유효 구인배율 1.57배(구직자 한명당 일자리 1.57개) 등을 달성(2019.11월 기준)
- 사실 콘크리트 지지층인 중장년층 지지만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하나, 日 자민당은 청년세대 집중 공약으로 지지기반을 확대 중
 - “젊은 세대의 니즈를 반영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중앙당 주도로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적극 개발
 - 자민당 홍보본부장 히라이 타쿠야는 “보다 두터운 지지층 확보를 위해 핵심 타겟층을 청년·10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그림 Ⅲ-1] 일본 청년층 내각 지지율 추이



주: “日 취업률 90% 고공행진… 아베 최대 지지층은 ‘이남자’”. 중앙일보(2019.3.28).

□ 日 자민당: 중앙당 주도로 청년 정책·전략 개발

- 청년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전략으로 “젊은 정당” 이미지 선점
 - <2016 참의원 선거 홍보물>에 ‘정치 아이돌’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를 메인모델로 전격 기용, 청년층과의 소통 메시지를 강조
 - 고이즈미는 사학스캔들을 정면 비판하는 등 아베 총리와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운 바, 그를 메인모델로 발탁한 것은 파격적 조치
 - 한편, 자민당은 젊은 정치인들을 그저 ‘얼굴마담’으로 소비하지 않고, 당내 청년국에 배속시켜 실무역량을 갖춘 정치인으로 양성하고 있음
 - 고이즈미도 2011년부터 3년간 청년국장을 역임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아소 다로(麻生太郎) 등 역대 총리 중 다섯 명이 청년국장 출신

[그림 III-2] 2016년 참의원 선거 홍보물



* 주: 일본 자민당 홈페이지 (<https://www.jimin.jp/>)

○ 유튜브, 웹툰 등 청년의 이해도를 높인 콘텐츠 생산

- 미래세대 포섭을 위해 홍보 매체로 유튜브, 웹툰 등을 적극 활용
 - 아베총리가 10대들과 함께 등장한 1분짜리 유튜브 ‘신시대(新時代)’를 공개, 새로 시작될 레이와 시대의 주인공이 청소년임을 강조

※ 참고: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ph_VWfjNA5c)

○ 잠재적 유권자 확보를 위한 청소년 및 어린이 맞춤형 공약집 제작

- 2012년 ‘18세 선거권’ 도입에 맞춰 유명여배우 포스터 활용, 청년 공약집 제작 등으로 선거연령 하향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선거 때마다 아동용 공약집 <어린이들을 위한 약속>을 제작·배포해 차기·차차기 선거 승리의 동력을 미리 마련

[그림 III-3] 日 자민당 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 정책 공약집



* 주: 일본 자민당 홈페이지 (<https://www.jimin.jp/>)

3. 아래서 위로(Bottom-up): 청년이 주도하는 보수가치 확산 운동

□ 미국 청년들, ‘샤이 보수’에서 ‘행동하는 보수’로 탈바꿈 중

- 경제호황, 청년단체 조직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청년보수가 증가하는 추세
 - 美 경제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며, 2030 세대에서 금기였던 ‘트럼프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청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³⁾
 - 18-34세 국정지지율 27%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美 보수세력 결집체인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 참가자 1만명 중 절반은 청년이 차지⁴⁾

3) “‘언행은 팡이지만 경제 살려서’... 20대 ‘샤이 트럼프’가 뭉친다”. 서울신문, 18면 (2019.12.23.)

※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 미국 최대 보수우파 시민행사로 대통령 등 전현직 정치인과 보수단체 대표 등이 직접 참여하며, 공화당 대선주자 발굴하는 장으로 활용

○ 미국 내 다양한 보수청년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에 설립된 ‘터닝포인트 USA’가 보수청년 결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

- 학생들은 보수 동아리·단체 소속되어 보수·자유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CPAC 등에서 아이디어 공유 및 공동전략 수립하는 등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
- 특히, 터닝포인트 USA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청년단체로 전국 1500여개 고교 및 대학교에 보수 네트워크를 구축

□ 터닝포인트USA: 청년 주도 풀뿌리 보수 네트워크 구축

○ 손에 잡히는 캐치프레이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접근성 강화

- 어려운 개념이 아닌 쉽고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굿즈(goods) 제작과 연계해 문화 운동으로 확산

[그림 III-4] 터닝포인트USA 캠페인에 참가중인 학생들



* 주: 터닝포인트USA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TurningPointUSA/>)

4) “보수주의 원류를 찾아서... 미국 보수주의운동 현장에서 배우다”. 미래한국(2019.4.2.)

- 또한, '좌파에 분노하지 않고 대화하기', '즐거운 보수 동아리 운영', '잡지에 기고되는 글쓰기' 등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캠퍼스, SNS 등에서 청년보수가 직면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적극 대응

- 2016년에는 진보 교수들의 反美 가치 홍보, 보수학생 차별에 맞서 <좌파교수 인명사전>(Professor Watchlist)을 제작 및 배포

- 정치적 견해로 인한 '쉐도우 밴'(Shadow Ban) 경험을 <십대 행동 정상회담>의 주제로 선정, 트럼프 대통령에 입법화를 직접 요구⁵⁾

※ 쉐도우 밴(Shadow Ban): SNS 플랫폼이 해시태그(#)를 붙여도 검색 노출이 안 되게 하는 등 특정 게시물 또는 사용자의 콘텐츠를 누락시키는 행위

○ 트럼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호흡하는 행사 개최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제고

- 트럼프 대통령도 터닝포인트 USA에 주최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해당 단체 행사를 청년 지지층을 확보, 재선의 밑거름으로 활용

[그림 III-5] 터닝포인트USA 행사에서 발언 중인 트럼프 대통령



5) "Young Conservatives at Turning Point: We're Being Censored". The Epoch Times (2019.7.24.)

4. 결론 및 시사점

-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및 청년 주도의 캠페인 전개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다음을 제안
 - 첫째,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닌 ‘1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접근
 - 자발적 참여를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맞추어 2030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둘째,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 새로운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안보·경제 등 기존 정책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캐치프레이즈 등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
 - 마지막, 2022 대선을 대비해 청년의 범위를 10代까지 확대할 필요
 -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 하향화’가 현실화된 바, 학부모 중심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정책 착안이 주효
- ※ 역산하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2004년생이 2022 대선에서 유권자로 성장

IV.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작성: 황성현 변호사 (pan23@daum.net)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를 위하여 행·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소상공인 영역에 특화된 기본법 제정안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담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향후 과제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위상 격상, 소상공인단체 결정의 구체화가 필요함

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배경

□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및 기존 법제도의 한계

-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의 하부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총사업체의 85.3%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경제활동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319만개로 전체 사업체(약 374만개) 대비 8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약 63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1,729만명) 대비 3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면서 국내 경제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

〈표 IV-1〉 2017년 기준 소상공인 현황

| 사업체 수(천개) | | | 종사자 수(천명) | | |
|-----------|-------|-------|-----------|-------|-------|
| 전체 | 소상공인 | 비중(%) | 전체 | 소상공인 | 비중(%) |
| 3,737 | 3,188 | 85.3 | 17,294 | 6,365 | 36.8 |

* 주: 2017년 기준 소상공인 현황 자료 e-나라지표

- 소상공인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법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에 관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변화하는 소상공인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의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정책목표나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나,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어 차별화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함
- 이에 국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일반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다르게 인식하고 차별화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다수의 정당에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발의하였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2020년 1월 9일 통과되었음

2. 소상공인기본법 주요 내용

□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현황 및 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 주요 법률안

| 구 분 | 발의일 | 위원회 회부일 |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일 | 소위 상정일 및 소위 심사경과 |
|--------|---------------|---------------|--------------------|------------------|
| 김명연의원안 | 2018. 7. 9. | 2018. 7. 17. | 2018. 8. 23. | 2018. 9. 12. |
| 홍철호의원안 | 2019. 1. 29. | 2019. 1. 30. | 2019. 3. 12. | 2019. 9. 26. |
| 이언주의원안 | 2019. 1. 30. | 2019. 1. 31. | 2019. 3. 12. | 2019. 9. 26. |
| 홍의락의원안 | 2019. 3. 29. | 2019. 4. 1. | 2019. 7. 12. | 2019. 9. 26. |
| 조배숙의원안 | 2019. 7. 11. | 2019. 7. 12. | 소위 직접 회부 | 2019. 9. 26. |
| 김규환의원안 | 2019. 10. 29. | 2019. 10. 30. | 소위 직접 회부 | |

- 소상공인기본법은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법률안을 발의 (자유한국당 3건, 민주당 1건 등)
- 2018. 7. 9. 김명연 의원안이 발의된 뒤 홍철호의원안이 발의되면서 논의의 속도가 높아졌음

□ 소상공인기본법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 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 심의회를 둠(안 제10조)
- 라.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31조까지)
- 마.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3.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

□ 소상공인기본법의 의미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 이에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며, 변화하는 소상공인 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법제도 발의

- 향후 소상공인 분야의 개별법이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더욱 활발하게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고 발전할 것을 의미함

- 소상공인기본법이 중심이 되어 소상공인 정책의 개별 분야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국회와 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자,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 발의, 2019.06.18.)”과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곽대훈의원 대표발의, 2019.07.15.)” 등이 발의됨

〈표 IV-2〉 개별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법률안 발의 현황

| 법률명 |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
|-------|---|--|
| 제안 이유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 제한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과 휴일 규정에 관한 특례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영업 대상업종의 지정·고시 • 업종별·상권별 바람직한 영업거리기준 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대기업등의 동일업종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 금지 • 공정영업 대상업종 영위 대기업등에 대한 의무휴업 명령 • 의무위반 대기업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다른 노동 관계 법률 보다 우선 적용 •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서면 합의 따라 최저임금액의 70% 초과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을 달리 규정 가능 •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서면 합의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무급으로 정할 수 있음 |

4. 향후 소상공인기본법 개선 방안 검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결과 제정법인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었음. 그런데, 이와 별개로 각 법률안의 정책적 지원 대상이 상이하며, 법률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기본법적 요소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정의 진통은 상당하였음

- 발의된 대부분의 법률안이 정책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홍의락의원안)”은 자영업주 중 일부를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소상공인 정책대상 확대 재논의 시에 ‘자영업주’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자영업에 대한 법적 개념은 부재한 상태이고, 자영업자의 개념도 통계조사를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확립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정책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본계획 주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즉, 소상공인 정책은 대기업 등 자본, 정보, 인력의 우위에 있는 집단의 영향을 수시로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단축(3년→2년)하거나 간략계획을 매년 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위상 격상) 소상공인 규제 및 정책 사항 등이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산재되어 시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
- (소상공인단체의 결성의 구체화)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어 있으나, 소상공인 관련 업종단체의 설립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설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